

# 안전충남 이슈브리프

##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에 살게 하다

배동철 교수 /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baedc@hoseo.edu

### CONTENTS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2. 안전생활터와 관련된  
충청남도의 여건변화 및 전망
3.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를  
만들기 위한 제언

#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에 살게 하다

배동철 교수(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 생활터 현황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 성장을 이룸
-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등한시 되거나 심지어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옴
- 지난 20세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터를 만들어 온 시기
- 1990년대는 고도 압축 성장을 통해 물질적·경제적 풍요는 가져다 주었지만 생활터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암울한 시기

### | 위험 사회

-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위험의 확장을 초래
-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이러한 현상을 “위험사회(Risiko gesellschaft, 1986)”라고 규정
-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위험과 그로부터 비롯된 불안은 생활터를 구성하는 일반 대중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

### 위험사회의 성격

#### 첫째, 위험은 전염성이 강함

- 기존의 사회적 공평이 계급에 따라 차별적이었던 것에 반해, 위험은 무차별적이고 따라서 민주적임
- 빈자와 약자뿐만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위험의 특징임
- 이러한 위험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둘째, 위험은 일정한 공간에 국소적으로 발생하고 끝나지 않음

- 위험이 발현되었을 때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는 공간적으로 예측하기 힘들며 그 피해를 과소평가한다면 구제역이나 시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피해가 양산됨

#### 셋째,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짐

#### 넷째, 안전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몰아내고 불안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등장할 수 있음

#### 다섯째,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은 점차 물이나 전기처럼 공공재로 전환됨

### | 우리나라는 위험 사회인가?

- 최근의 재난과 위험관련 이슈에서 폭염이나 폭설, 가뭄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위험이 대두됨
- 지진 등의 자연재난 빈발
- 미세먼지와 황사에 의한 위험

- 각종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 등
- 불과 한 세대 전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의 위험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
-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은 끊임없이 발생
-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주지만, 그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을 모두 측정하고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 과학기술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위험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위험의 가능한 한 최소화가 현실적인 대안임

## | 안전비전 2050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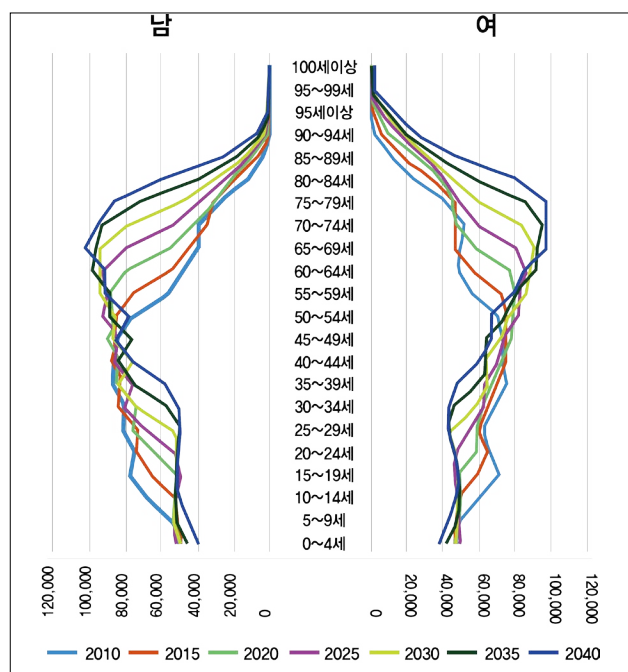
- 생활터 내에 존재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피해발생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 이미 위험사회가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터를 말 그대로 “안전생활터”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에 본 글에서 안전생활터의 정의와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함

## 2. 안전생활터와 관련한 충청남도의 여건변화 및 전망

### | 생활터 구성원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의 인구는 2030년 2,323,8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유소년 인구(0-14세)의 경우 2010년 16.2%에서 2030년 13.1%로 감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68.6%에서 6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5.2%에서 35.2%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
- 남녀별로는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여성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인구추계교실」

## |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 복지분야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을 중점관리하는 형태가 아님
-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은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차별화 하여 관리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재난취약계층”의 경우 위험의 종류에 따라 그 피해가 더 커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통해 탄력성과 회복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현황

- 화재분야 지역안전등급은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매우 낮은 편
- 시군별로는 도청이 소재한 홍성이 2등급으로 높은 편이나 천안, 계룡, 당진, 태안이 3등급,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서천, 청양, 예산이 4등급, 공주, 보령, 부여가 5등급에 속해 대부분 지역의 화재 취약성이 높음
- 화재피해의 경우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명피해에 비하여 재산피해액이 많으며, 이재민 수 발생이 높음

년도	발생건수	피해액	피해경감액	인명피해			이재민수
				소계	사망	화상	
2010	2,994	27,140,238	-	135	26	92	208
2011	3,089	17,955,682	516,597,251	124	18	117	250
2012	3,098	21,739,562	458,641,995	95	17	107	207
2013	2,784	24,508,566	720,901,422	108	13	82	165
2014	2,838	20,475,505	483,674,055	86	26	70	210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 교통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광역시도 중 대구, 울산, 전북과 같은 등급에 속함
-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하위 등급에 속해 있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11.22	10.64	10.47	9.72	11.11
서울특별시	12.04	11.63	11.62	11.14	13.54
부산광역시	10.79	10.67	11.29	9.43	10.45
대구광역시	13.44	12.99	12.43	11.29	13.54
인천광역시	9.82	9.13	8.31	7.00	7.09
광주광역시	15.19	13.94	13.94	12.76	13.90
대전광역시	9.51	9.69	8.82	8.45	9.50
울산광역시	9.86	9.13	9.02	8.77	10.27
세종특별자치시	-	-	6.51	6.74	7.09
경기도	9.62	9.31	9.28	8.70	10.25
강원도	13.67	13.47	12.84	11.89	12.90
충청북도	12.20	11.87	11.62	11.12	12.77
충청남도	9.75	8.91	8.50	7.80	9.04
전라북도	13.35	12.51	11.87	10.81	11.85
전라남도	13.27	11.61	11.55	10.80	12.00
경상북도	13.03	11.58	11.57	10.88	12.22
경상남도	9.26	8.52	8.59	8.11	8.88
제주특별자치도	12.83	11.78	11.43	11.12	11.6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1등급의 세종, 전북, 2등급의 서울,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중위 등급에 속함

구분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천안시	0.551	0.709	0.925	0.626	6
공주시	0.485	0.887	0.770	0.531	4
보령시	0.535	0.785	0.450	0.725	8
아산시	0.532	0.876	0.310	0.777	9
서산시	0.452	0.838	0.340	0.714	8
논산시	0.555	0.800	0.310	0.808	10
계룡시	0.392	0.894	0.280	0.705	8
당진시	0.485	0.815	0.536	0.638	6
금산군	0.567	0.743	0.864	0.632	6
부여군	0.615	0.704	0.382	0.843	10
서천군	0.552	0.638	0.623	0.726	8
청양군	0.550	0.835	0.400	0.748	8
홍성군	0.469	0.723	0.488	0.682	7
예산군	0.459	0.771	0.240	0.795	9
태안군	0.510	0.742	0.582	0.662	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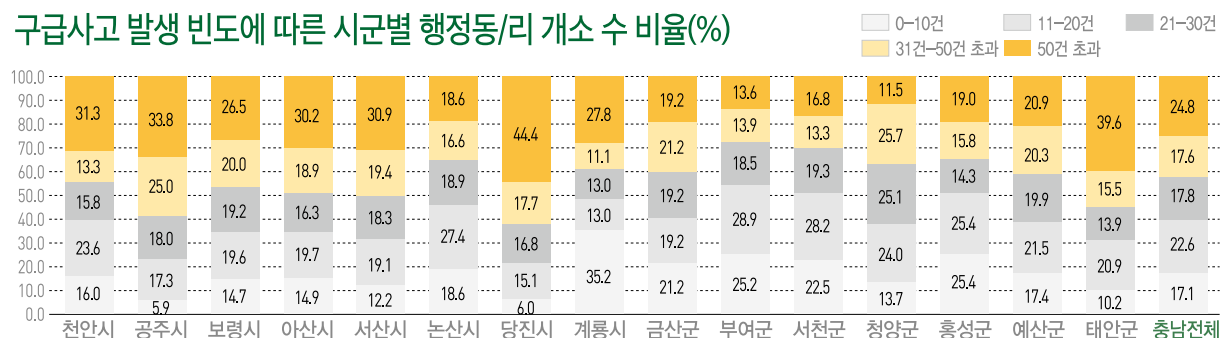
- 2012년 충청남도가 발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재난재해 취약성은 폭설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이 높음
-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취약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자연재해 분야의 위험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범죄안전등급은 대구, 대전, 경기, 경남과 함께 3등급에 속함
- 서울, 부산, 강원, 충북의 4등급, 광주, 제주의 5등급보다는 양호한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연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 형사범	특별법범
2010	70,989	924	12,545	7,381	9,773	566	2,020	37,780
2011	63,052	1,018	12,369	8,897	10,319	507	2,155	27,787
2012	67,551	1,043	14,035	9,480	11,282	462	2,544	28,705
2013	70,573	1,110	13,152	9,384	13,110	382	2,841	30,594
2014	71,135	1,131	11,976	9,726	12,243	420	3,189	32,45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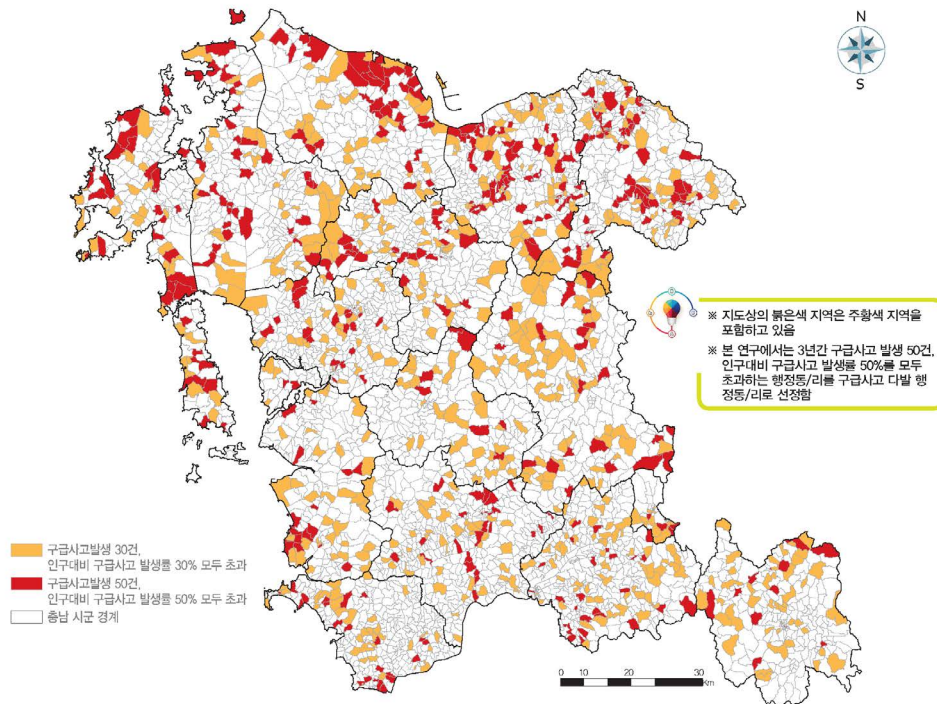
-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울산, 제주의 5등급, 서울, 광주, 강원, 전남보다는 상위 등급에 속하고 있으나 가까운 세종(1등급), 대전(2등급), 충북(2등급)에 대비하여 낮은 등급에 속하고 있음

### 구급사고 발생 빈도에 따른 시군별 행정동/리 개소 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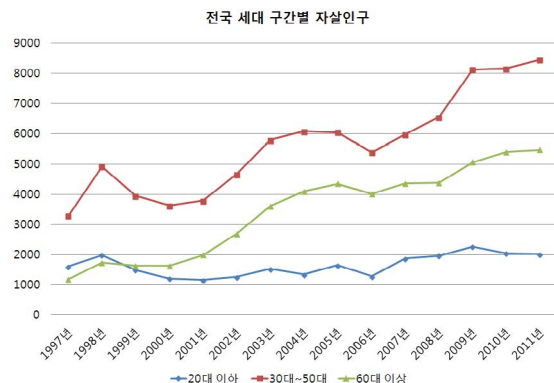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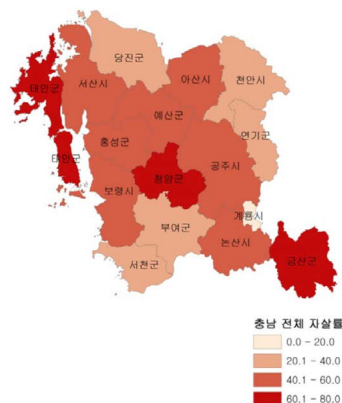
※ 자료: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통권5호)」

- 시군별, 행정 동/리 별 인구대비 구급사고 발생률이 3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체 4,417개소 중 974개소(22.1%)이며, 인구대비 50%이상 발생하는 지역도 387개소(8.8%)에 이르고 있음
- 시군별로는 태안(16.0%), 당진(14.2%), 아산시(12.7%) 소재 순으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통권5호)」

- 2015년 기준 산불발생건수는 23건으로 최근 10년 평균(05-14)인 16.5건 대비 약 7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산불관리에 대한 관심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 강원, 부산의 5등급 지역을 제외한 광역 시도 가운데 인천, 대전, 대구, 전남과 함께 자살 안전등급이 4등급인 위험지역으로 발표됨
- 2011년 기준 태안, 청양, 금산의 자살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음
- 세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50대 자살인구는 2008년을 분기점으로 2009년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속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자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에 관심이 요구됨



※ 자료: 충남발전재단연구원, 2014, 「충남리포트 제113호」



- 감염병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종, 전남의 5등급, 경북, 대구, 부산의 4등급 이외에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 3.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를 만들기 위한 제언

#### |안전·안심 위험요인 저감

- 충청남도의 지역특성상 시군과 읍면의 격차가 크고 자연환경도 상이함
-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도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삶터와 일터, 배움터, 놀이터 등 다양한 생활터에서 도민들이 경험하는 주요 위험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정립해야 함
- 생활환경을 생활시설별로 구분하면 주거시설,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병원, 요양원, 마트, 시장, 영화관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사현장, 기간시설(도로, 교량, 철도 등) 등이 있고,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안전·안심의 생활환경은 단순히 규제나 제도가 있고 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님
- 도민 스스로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이나 경험하는 위험 상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변화시킬 때 달성할 수 있음
- 생활환경에 적용하는 규제와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통로를 개발한 후 규제나 행정·기술적 제도를 통해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도입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 ①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 ②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③ 생활환경 안전규제 강화
- ④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고려가 필요

#### |구조구급·골든타임 확보

- 충청남도에서 육상 및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초동조치 역량 강화가 중요함
-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입체적인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구급상황의 경우, 통상의 골든타임은 5분임
- 시군 단위 별 도로상황과 시간대 별 운행차량의 정도가 일차적인 중요변수임
-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로 기준 완화(2009년 도로폭 등의 기준이 하향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진입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하여

- ① 골든타임 저해 요인 제거
- ②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등의 고려가 필요

##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재난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회복력과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 재난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원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고 최소한의 피해에 그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난피해자를 위한 재난구호 강화를 포함하여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중, 재난 발생 이후 등 재난관리 전반에서 신속한 상황 반응과 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 논의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 ①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 ②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 ③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등의 고려가 필요

##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주택법 2조 20호(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충남발전연구원, 2014, 「충남리포트 제113호」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통권5호)」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index/statistics.action>

Ulrich Beck, 1986,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TEL 041.840 1114 FAX 041.840 1199

<http://www.cni.re.kr> 발행일 | 2017.04 발행인 | 강현수

편집인 | 양기근, 박근오 편집디자인 | 디자인화랑(042.625 5310)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Center for Disaster & Safety Research

안전충남  
이슈브리프